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보도		2019. 5. 28.(화) 조간	배포	2019. 5. 27.(월)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하 주 식 (02-2100-2960)		담 당 자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97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 (02-3145-7460)			한 창 훈 팀 장 (02-3145-7466)
	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고 봉 중 (02-3702-8550)			최 정 수 부 장 (02-3702-9780)

제 목 :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!

-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-

- ① **(일방과실 확대)** 피해자가 **예측·회피**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**가해자 일방과실(100:0)**을 적용하도록 **과실비율 기준 신설·변경(33개)**
- ② **(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)** 최근 설치된 **교통시설물**(자전거 전용도로, 회전교차로 등) 및 **교통환경 변화**에 따른 **과실비율 기준 신설·변경(13개)**
- ③ **(법원판례 등 반영)** 최근 법원판결 및 **법규**(도로교통법 등) **개정사항**을 반영하여 **과실비율 기준 신설·변경(27개)**
- ④ **(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)**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, 자기 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**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**을 확대

I . 추진배경

□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(가해자와 피해자)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

○ 과실비율에 따라 ① 사고의 가·피해자를 결정하고, ②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*

* (예) A,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: 50인 경우 ⇒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%를 우선 보상하고,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%를 구상

※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(☞ 민법 §396, §763)

- 그런데,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'과실비율 인정기준'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

*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: ('15년)43,483건 → ('17년)61,406건 → ('18년)75,597건

- 아울러, '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'*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 가중

* '17년중 약 5.6만건 사고 발생

➡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*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** 확대 방안을 마련

*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,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

**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,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

※ 금번 개정(안)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(학계, 정부, 경찰, 언론, 시민단체 등)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

< 참고 >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

- (과실비율 인정기준) '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·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'과실비율 인정기준'을 마련·운영

-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

- (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)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'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·운영

<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* 구성 및 기능 >

구 분	구 성	기능 및 운영
심의전 대표협의	■ 협정회사 대표	-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-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
소 심 의 위 원 회	■ 변호사 1인 또는 2인	-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·결정 -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·결정 -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·결정 -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
재 심 의 위 원 회	■ 변호사 4인	-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·결정

* '19.4.17. 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」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

Ⅱ. 「과실비율 인정기준」 주요 개정내용

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현행 ‘과실비율 인정기준’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(총 57개)중 일방과실(100:0) 기준은 9개(15.8%)에 불과하여

-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‘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’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


*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

- ▶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
- ▶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

□ **(개선방안)**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(22개) 및 변경(11개)

<참고> 주요 신설·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도표 예시

①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(변경)

번호	도표	사고상황			
251 도표		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			
		현행		개정안	
		A	B	A	B
		20%	80%	0%	100%

②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(신설)

번호	도표	사고상황			
259 도표		직진신호에 직진·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			
		현행		개정안	
		A	B	A	B
		-	-	0%	100%

2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

- ☐ (현황 및 문제점)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~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,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 발생
- 이에 따라,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(신규 교통시설물 등)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
 - 그러나,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,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

*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관련 과실비율 분쟁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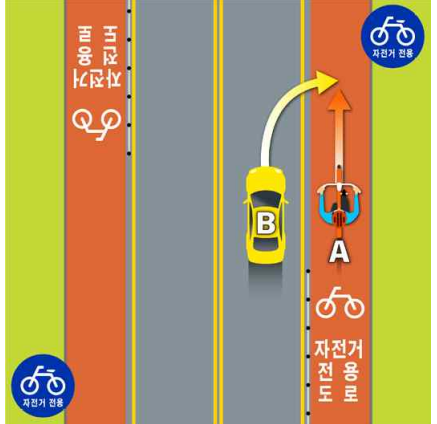
- ▶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(90:10)로 안내
- ▶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움

- ☐ (개선방안)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(12개) 및 변경(1개)

<참고>

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

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(신설)

번호	도표	사고상황			
453 도표		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			
		현행		개정안	
		A	B	A	B
		-	-	0%	100%

② 회전교차로 사고(신설)

번호	도표	사고상황			
262 도표		회전교차로(1차로형)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			
		현행		개정안	
		A	B	A	B
		-	-	80%	20%

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

- ☐ (현황 및 문제점) 최근 법원에서 '과실비율 인정기준'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*가 발생하여 '과실비율 인정기준'의 신뢰성 저하

*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

- ▶ 현행 '과실비율 인정기준'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,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(서울중앙지법 2019.4.29. 선고, 2018나78260 등)

- 또한, 소방기본법*·도로교통법**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

*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(최고 20만원→200만원) ('17.12.26. 개정)

**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('16.1.27 개정)

- (개선방안)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(20개) 및 변경(7개)

- 아울러,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'과실비율 인정기준'에 반영

<참고>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도표 예시

①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(변경)

번호	도표	사고상황			
376 도표		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			
		현행		개정안	
		A	B	A	B
		30%	70%	70%	30%

②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(신설)

번호	도표	사고상황			
267 도표		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			
		현행		개정안	
		A	B	A	B
		-	-	60%	40%

4

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

- (현황 및 문제점) '19.4.18일 이전에는 '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'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

- 이에 따라,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*,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'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'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**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

*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.6만건('17년)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

**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

▶ 가해자,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 과실로 안내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,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받음

- (개선방안) '19.4.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*

* '19.4.17. 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」 개정 완료

<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>

사고 유형	현행	개선
가·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(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)	○	○
가·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	X	○
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	X	○

III. 기대 효과

- ① 피해자가 예측·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
- ② 자전거 전용도로,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
- ③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'과실비율 인정 기준'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
- ④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

IV. 향후 추진계획

- ☐ 개정 '과실비율 인정기준' 시행(손해보험협회, '19.5.30. 시행)

※ '동일 보험회사간 사고' 및 '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'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'19.4.18일부터 시행 중

- ☐ 개정 내용 홍보(손해보험협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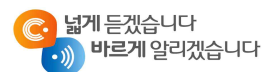
-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인터넷(유튜브 등) 게시

※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
(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<http://www.fss.or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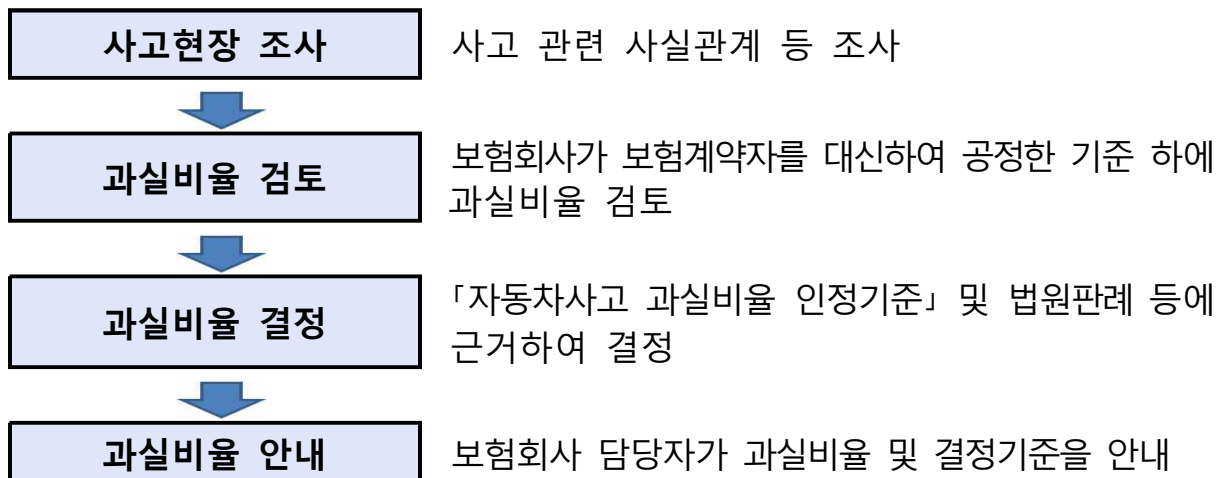


①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'과실비율 인정기준'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.

-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 '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'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.
-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'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'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(참 고)

< 과실비율 결정 과정 >



②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,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*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.



* 손해보험협회(www.knia.or.kr)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(<http://accident.knia.or.kr>)

-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「파인*」,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「보험다모아」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.

* 네이버다음 등에서 "파인"(<http://fine.fss.or.kr>) 검색 → 파인 홈페이지에서 '보험다모아' 선택 → '자동차보험'의 '자동차사고 과실비율' 선택

- 또한 스마트폰 앱 '과실비율 인정기준'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.

- 다만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앱 개편으로, 기존 앱은 삭제하고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「과실비율 인정기준」 접속 방법	
스마트폰 앱 다운로드	포털사이트 검색
 <p>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시 사고당사자의 책임정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 (예 : 70% 대 30%)</p>	 <p>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.knia.or.kr/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위치. 교통사고 과실비율, 인정기준, 과실상계 절차, 분쟁해결, 조정기구 안내, 심의진행</p>
손해 보험 협회 홈페이지(배너 클릭)	
	 <p>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.knia.or.kr</p>

과실비율 조회 화면

과실비율 사고유형

과실비율 및 설명

201
사고상황

자동차 A
녹색 진입

자동차 B
적색 진입

Main >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> 신호기에 의해 교통

Case1

과실비율	도표해설	관련법규	판례·조정사례
기본과실①	A0 : B100		
사고상황	자동차A : 녹색 진입 자동차B : 적색 진입		
적용과실	A0 B100		
가감요소			
<input type="checkbox"/> A 현저한 과실①	10	0	
<input type="checkbox"/> A 중과실①	※	0	
<input type="checkbox"/> B 현저한 과실①	※	0	
<input type="checkbox"/> B 중과실①	0	10	

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녹색신호에, B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.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B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. 따라서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%로 산정하였습니다.

③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,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-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·확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합니다.
-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고 회피가능성,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④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.

-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,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*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
* 가입된 보험회사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요청

*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(02-3702-8500)로 전화 후 ④번 상담원 연결